

# 경의선 연결을 계기로 한 남북중 경험사업: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연계협력

남북중 경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 부처 간 연석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의 단계별 사업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2015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의 적극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인프라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중 간에는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과 관련한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은 물론이고 최근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으로 남북 간 철도연결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는 핵심적 프로젝트이다. 또한 이 구상은 남북한 연결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몽골, 일본 외에도 역외 국가이지만 동아시아의 이해당사국인 미국을 끌어당겨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장기적 비전이다.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연계협력은 대북 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한중 협력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협력 경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북방 경제협력의 핵심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와 맞닿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경험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압록강 유역의 단둥-선양(-다렌) 벨트(랴오닝연해 벨트), 두만강 유역의 훈춘-창춘 벨트(창지투 벨트)가 이에 적합하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 와서는 이를 확대하여 남북접경지역(개성, 금강산)의 협력개발과 연동해서 단둥-신의주(황금평·위화도), 훈춘-나선 초국경 협력개발로 확대하여 남북중 3각 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남북접경지역과 북중 접경지역의 종축 벨트를 잇는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정합적 연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딜레마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을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방안이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의 발전에 따라 북중, 한중,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진흥계획이 서로 연계 발전하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남북중 3국이 서로 동의한다면 곧바로 협력을 위한 초기 행동

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두 구상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한중 간 공동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경협을 매개로 향후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중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을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북한의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 방침과도 서로 연계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이후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적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자칭하며, '우리 식의 경제관리개선방법'으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수요에도 부합하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4점2선'으로 요약되는데, 남선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두 개의 중점으로 한국을 향해 있으며, 북선은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두 개의 중점으로 중국, 러시아를 향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전략 배치는 현재 남선과 북선이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만일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협력에 참여하여 북중, 북러, 남북한 나아가 동북아 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건설은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남북 간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교통물류, 통신, 전력,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협력에서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단계: 일대일로 사업 동반진출과 북방 경제협력 거점 확보

AIB 창립회원국이자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에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여 주는 동시에 경제협력의 독자적인 거점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6대 경제회랑과 전략적 해양거점인 항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다소 우려와 경계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외진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기업의 참여는 사업의 리스크 경감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점이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내부의 구조적 요인과 대외개방의 한계로 침체 위기에 있는 동북3성은 중국 일대일로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 관통하는 지역이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방으로 연결되는 핵심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주요한 거점들이 분포되어 있다. 대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단둥-선양(-다렌) 벨트와 훈춘-창춘 벨트는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며 기존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사업토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거점 확보로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전개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사업,

특히 프리모리에 1, 2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계 구축방안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싱크탱크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아울러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통해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참여는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중몽러 경제회랑의 흐름이 한반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는 1단계에서는 남북중 경협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범적으로 동북 지역 거점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단둥-선양 벨트와 훈춘-창춘 벨트에 한국 중소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이나 북한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사업이나 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예를 들어 연변대 훈춘분교의 국제물류학과의 공동운영)을 추진해 볼 수 있다.

## 2단계: 신의주-단둥/나선-훈춘 초국경협력개발

신의주-단둥/나선-훈춘 초국경협력개발은 동북 진흥전략의 연장선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2009년 이후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에 따른 관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같은 시기 압록강 유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계획'과 두만강 유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어 추진되면서 신의주-단둥, 나선-훈춘을 연계하는 물류인프라를 핵심으로 북중 간 초국경협력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다.<sup>1)</sup>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현재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협력을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본격

1) 북핵개발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과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초국경 협력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고 단절되기도 하였음

적인 협력개발사업을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는 가운데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경의선, 동해선의 착공을 계기로 물류인프라 연계와 특구(경제개발구)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북중 간 초국경 협력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전개될 통일경제특구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을 남북중 경협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경제회랑 구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2단계에서는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한 위탁가공사업, 남북중 농수축산업 협력, 북중 접경지역 통합물류망 사업, 남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다.

### 3단계: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구축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은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중몽러 경제회랑을 한반도로 확장되는 과정이며,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방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철도 및 도로 등 물류인프라 개발

및 네트워크 연계를 핵심으로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협력의 1+3의 협력구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인프라 연계를 핵심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서단인 압록강 유역에서 중국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 북한의 황금평·위화도(신의주) 개발계획의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고, 여기에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황해 경제벨트계획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한다. 동단인 두만강 유역에서는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선도구 개발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개발계획, 북한의 나선지역 개발계획 등이 한국의 환동해 경제벨트 계획과 서로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을 구축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중국 경제회랑 및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으로 이루어진 동북아경제회랑은 북중 및 북러, 남북한 간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운송회랑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통신, 전력, 광케이블 등의 인프라 연계는 물론이고 회랑의 연선 거점도시(특구)에 대한 개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견인하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1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그림2 ·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이나 한반도-러시아-중국 경제회랑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해제를 통해 북한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이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 위에 이와 관련한 다자간 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GTI 등이 주요한 협력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개발(금융)기구의 발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방향

남북중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남북중 경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 부처 간 연석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활용하고, 그 안에 (가칭)남북중 경협추진단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는 것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한반도-중국 경제회랑의 단계별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중 경협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 등 민간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존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한 기관 및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협력 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수행하고 여건이 악화되었다면 이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

의 경험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의 경험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정보와 자금조달 지원이 요구된다.

### 중국 측 협력 확보 방안

한중 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연계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내 연구기관(KDI 혹은 KIEP)과 중국 연구기관(국무원발전연구중심 혹은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남북중 경협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1.5트랙 기제로서 우리의 민주평통,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북한의 아태위원회 간 3자 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주도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아가 남북중 정부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매개하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중 경협에서 기존의 남남북중(南南北北中) 구도나 심지어 통중봉남(通中封南)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별 관리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북중 접경지역과 남북 접경지역에 한중이 교차 투자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개성에 설립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둥, 훈춘 등의 북중경협 거점에 (가칭)남북중 경협센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으로서 (가칭)남북중 철도협의체 설립을 통해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매개로 동반투자 방식의 건설 및 개발사업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한다.

### 남북중 경협사업 추진 시 리스크 관리 방안

무엇보다 남북중 경협사업의 최대 리스크인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협력, 북중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북중협력이 선순환적 구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다소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지만 남북협력은 물론이고 우리 주도의 남북중 3각 협력에 대한 보다 담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경의선 연결은 물론이고 남북경협, 북중경협, 그리고 남북중 경협 또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동되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에 따른 단계별 협력 방안과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중 경협사업이 자칫 미국, 일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오해되거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따라 미국, 일본 외에도 다국적 자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개방적 협력구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사업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만, 남북협력은 물론이고 우리 주도의 남북중 3각 협력에 대한 보다 담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경의선 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협력으로 유인하는 적극적 입장과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 기타 고려사항

남북중 3각 협력은 주로 과거 남북관계가 단절된 반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등 북중관계가 활성화되었던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종속을 우려하고 미래 통일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협력, 북중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북중협력이 선순환적 구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비록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다소 우여곡절을 겪을 전망이지